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내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의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과제 및 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그리고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 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4. "대필"은 논문 제목, 목차 설정, 논문 내용, 자료 분석 및 정리 등을 포함한 논문 대부분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
5.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6.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7.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5조(용어의 정의)

- ①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또는 연구지원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②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연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③ "예비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④ "본조사"라 함은 연구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 ⑤ "판정" 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6조(기능) 연구윤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①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과 관련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연구윤리강령 등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③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 ④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실시결정 및 조사결과의 판정, 승인 및 재심의에 관한 사항
- ⑤ 그 밖에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연구윤리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이 된다.

- ① 본교 교무처장, 신학대학원장, 각 학과(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9조(간사) 연구윤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어 제반 행정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1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연구진실성에 저해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예비조사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13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① 예비조사는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를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②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3. 제보일이 시효기간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14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예비조사 결과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친 후 총장에게 보고 하고 1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과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 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와 허위 제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5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본조사 실시 결정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③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조사위원 전체에서 외부인의 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한다.
2. 조사위원 중 해당 연구분야 전문가 50%이상으로 하되, 이 중 소속이 다른 외부 전문가 1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조사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 ① 당해 조사사안과 이해갈등 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8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자의 연구 자료를 압수·보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정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자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21조(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조사위원회는 이의제기 또는 변론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위원회 명단

제22조(판정)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에 근거하여 피조사자의 연구부정 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② 판정은 예비조사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조사내용 및 결과에 대한 판정에 위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연구진실성 검증 이후의 조치

제23조(결과에 대한 조치)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총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계조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거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담당부서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결과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회·증인·참고인·자 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본 규정 개정안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